

이슈브리프



- 조부모 영아양육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유희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김수완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부모 영아양육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¹⁾

유 희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맞벌이 가구 자녀 양육 지원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조부모 손자녀 육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 국가가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육아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부모 손자녀 육아 참여 정도와 직결된다.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어서 낮 동안 어린 자녀를 돌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국가가 잘 지원해주지 못하면 특히 아직까지도 육아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국가들에서 취업모들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육아지원 방법을 찾아야 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확대되어 온 방안이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은 확대 경향이 있으며 몇 가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취업환경은 종일제 형태이며 나아가 야근문화가 만연하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혹은 취업여성이라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육아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은 취업여성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지원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하여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 혹은 취업여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녀양육 특히 영아 양육 지원에 대하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을 정책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

¹⁾ 본 글은 유희정·이슬·홍지수(2015).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5-4를 요약 정리한 것임.

는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양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토대로 맞벌이 가구의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과 관련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양육 지원의 한 대안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활성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500명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녀돌봄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있는 아이부모에 대한 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 500가구 중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이부모 100표본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500표본 중 100표본과 쌍표본(Pair Sample)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18명과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는 아이부모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나. 조사결과

1) 손자녀 돌봄 현황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결과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맡게 된 주요한 동기는 자녀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 동기(67%) 및 영유아 양육을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라는 동기(42.8%)가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큰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퇴근시간까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19.5%,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 너무 어려서가 11.4%, 주위에 믿고 맡길만한 영유아 돌봄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1.5%, 부모님이 직접 돌보길 원해서가 10.3%로 나타나 아이부모의 경우 사회적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불안감 및 퇴근 이후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적합한 기관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조부모에게 자녀돌봄을 맡기게 된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조부모에게 손자녀를 어디에서 돌보는지 돌보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손자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서 돌본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내 집에서 함께 살며 돌봄이 27.0%, 아이부모 집으로 가서 돌봄이 26.8%, 아이부모 집에서 함께 살며 돌봄이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조부모의 69.0%는 현재 돌보고 있는 손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을 다니고 있다고 답하였다. 손자녀 연령별로는 손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 육아지원기관을 다니고 있다는 응답은 4.3%였다. 그러나 손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아지원기관에 다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세부터 5세 미만 손자녀는 육아지원기관을 다닌다는 응답이 94.5%, 5세부터 7세 미만 손자녀는 육아지원기관에 다닌다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경우 상당수 육아지원기관에 보내지 않고 조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으며, 영아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내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99.2%가 아이의 음식이나 간식을 먹이기, 낮잠을 재우고 대소변을 봐 주고 정리하기, 옷 입히기, 씻기기

등의 일상돌보기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1.4%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데려가고 데려오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으며, 79.6%는 아이의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병원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1.2%는 집에 오는 육아도우미를 관리하는 역할, 89.6%는 함께 놀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에게 아이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받는다 73.0%, 가끔 받는다 14.0%, 받지 않는다 13.0%의 응답율을 보여,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답한 조부모가 실제 받고 있는 월 사례비를 살펴보면 월 평균 61.1만원이었다. 아이부모가 조부모에게 드리고 있는 정기적 사례비 또한 유사하게 월 평균 59.6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돌봄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점들 중 조부모들이 가장 공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66.0%, 손자녀가 커 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어 생활의 즐거움이 늘었다는 응답이 6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 간 대화가 늘고 가족이 자주 만나 화목해졌다는 응답이 32.4%, 손자녀 돌봄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게 생각되어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된다는 응답 16.2%, 나의 인생경험으로 손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좋다는 응답 12.2%를 보이며 노후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7.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답하고 있으며(59.4%), 다음으로는 아이 돌봄으로 인해 교우관계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인 것(41.0%)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보

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응답과 살림까지 같이 하기 벅하다는 응답은 각각 32.0%, 30.8%이었다.

손자녀 돌봄을 지속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조사대상 조부모 응답자의 73.8%는 만약 이제 손자녀를 그만 돌봐도 된다면 그만 두겠다고 답하였으며, 26.2%는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더라도 계속 돌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답했다.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정책화 가능성

조부모에게 자신의 손자녀를 조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정부에서 활성화하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전체의 61.6%가 찬성, 3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아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62.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 부모가 편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어서(45.1%), 노인들의 역할이 생겨서 활력소가 되므로(25.6%),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22.4%), 노인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므로(17.2%), 아이 부모의 가계에 도움이 되므로(16.2%), 가족 간의 대화가 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6.2%)의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68.2%의 응답자가 노인들의 건강에 무리가 되는 일이라서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53.6%의 조부모는 노인들의 시간을 뺏는 일이라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이부모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86.9%가 찬성하여, 조부모에 비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정책 활성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양육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

부모의 44.0%는 육아휴직제나 탄력근무제, 정시퇴근 문화 조성 등 아이부모가 직접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35.6%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보미 파견 등 공공육아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20.0%이다. 아이부모 또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0%가 아이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2.0%는 공공육아서비스 확충 방향, 19.0%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조부모의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조부모의 가장 큰 지원요구는 일정시간 돌봐주는 보육기관 또는 돌봄기관을 확대하는 것(49.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휴식 공간 제공 요구가 39.8%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전지원 요구가 35.0%,

돌봄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요구 34.2%, 조부모 건강지원 프로그램 요구는 20.4%로 나타났다. 그 외 보조인력 지원 요구가 10.0%,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요구는 2.2%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3. 정책제언

1) 조부모 육아지원 대상

조부모의 손자녀 육아 지원은 현재 영아돌봄, 유아돌봄 중 영아돌봄에 집중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아 육아지원을 대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조부모 육아지원에 대한 비용 지원

0-2세 영아 자녀가 사회적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기관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지원금의 최소 30%에서 50%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이 금액이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0세 손자녀인 경우 월 300,000원에서 500,000원, 1세 손자녀는 월 250,000원에서 350,000원, 2세 손자녀는

〈표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제안)

	국공립기관이용 시 지원 금액	현행 양육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0세	1,048,712원	200,000원	300,000~500,000원
1세	755,009원	150,000원	250,000~350,000원
2세	588,136원	100,000원	200,000~250,000원
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단설유치원: 785,423원 • 공립병설유치원: 616,070원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389,128원 - 4-5세: 372,085원 	100,000원	100,000원

* 조부모돌봄수당(양육지원수당)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200,000원에서 250,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유아인 경우 대부분의 유아들이 사회적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양육수당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동의한다.

조부모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로는 영국의 친척 양육수당, 호주의 조부모 급여수당, 미국의 조손가구 지원인 후견인 보조금을 들 수 있다. 조부모 육아지원 정책이 안착되면, 조부모 육아지원금을 조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3) 보조인력 지원

조부모 육아지원이 영아 양육 대안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종일 보육 형태이다. 본 조사 결과에서 조부모들은 하루 평균 6.69시간 손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특히 손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57시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아 양육의 특징은 모가 출근하기 전부터 손자녀를 돌보기 시작하여 손자녀의 모가 퇴근 할 때까지 꼬박 영아를 돌보는 형태이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혼자서 하루 10시간 이상 영아를 돌본다는 것이 체력에 무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씻기고 옷 입히는 일, 대소변 처리, 낮잠 재우기, 식사와 간식 준비하고 먹이고 치우는 일, 때로는 집안 청소 등 집안일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보조교사, 아이돌보미 등의 보조 인력을 파견하여 하루 중 일정 시간 조부모들이 쉴 수 있는 틈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권역별로, 주 1~2회 정도, 하루 일정 시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육아활동 지원

조부모들의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들의 발달 및 성장 특징, 영아 양육 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노인시기의 자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 살 마을’등의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을 참고할 수 있다.

조부모 육아지원 공간의 확보 및 지원 요구는 현재 지역사회내의 육아지원종합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는 조부모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손자녀 육아하기, 육아 관련 정보 교환, 육아관련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가칭) 조부모 아기놀이터, 조부모 육아나눔터 등이다.

5) 조부모 육아 모니터링, 관리지원

조부모들에게 정부 예산 지원이 시작되면 제도가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부모 육아에 대한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부모 육아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역별로 육아지원 인력을 양성, 지원할 수 있으며, 조부모 육아교육 시행, 조부모 육아지원 수당 지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들은 현재 영유아 양육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전체 육아지원정책 범위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시범운영 등으로 세부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6) 조손가구 종합지원

조부모가 손자녀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손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낮 시간 동안 부모가 취업 등으로 육아가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이를 지원해 주는 경우이다.

다른 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손자녀에게 부모

가 부재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손가구의 경우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의할 때 조손가구는 대체적으로 빈곤가정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의 조부모 역시 저소득층이 많아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특히 빈곤층 조손가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생계비 지원, 조부모 일자리 지원, 손자녀 양육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 등의 사례에 서와 같이 일정 연령의 자녀가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 수당 지급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¹⁾

김 수 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송 효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출산크레딧 제도이다. 연금크레딧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김수완, 2012:15).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따라 출산크레딧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²⁾.

출산크레딧제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혜택으로 인해 주로 여성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 1인 1연금을 앞당기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출산크레딧의 확충과 개선은 그 자체로 여성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크레딧제도의 정책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컨대 연금크레딧 제도를 출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분에 대한 지원적 성격보다는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접근되는 측면이 있다.

1) 본 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5년 일반과제 박복순·송효진·구미영·김수완·유혜경(2015).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위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반과제「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연구로서 수행된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동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출산크레딧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국민인식조사 분석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조사 및 분석결과

1) 조사개요

일반인의 출산크레딧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2,039명의 만 19~5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5년 5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 연령,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2015년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고용형태 현황에 따라 경제활동상태별(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종사상지위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인구구성비에 맞게 추가 할당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자는 총 2,039명이며³⁾,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2\%$ 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2015년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하였으며,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2) 분석결과

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한 인지도

대다수의 국민은 아직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출산하면 일정기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 67.1%,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 한다' 31.2%, '잘 알고 있다' 1.7%로 나타났다.

다만 이 제도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대상층인 20~30대는 40대 이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경우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출산크레딧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가 70.5%, 30대가 69.1%, 20대가 65.9%, 50대가 62.6%를 차지하였고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 보면 동일 응답에 대해 미가입자는 71.4%, 사업장 가입자는 66.1%, 지역가입자는 64% 순으로 제도에 대한 비인지도가 높았다. 한편 성, 학력, 자녀수, 도시규모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한 인지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의 필요성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국

2) 남성도 군복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져 연금 가입기간 확보가 불리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해에 군복무 크레딧을 도입하였다(양성일, 2014:2).

3)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51.2%, 여자가 48.8%이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23%, 30대 23.9%, 40대 27.6%, 50대 25.5%임.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 20.5%, 경기 및 인천 30.6%, 중부권 12.9%, 호남권 10.8%, 영남권 25.2%로 구성되었음. 종사상 지위별 분포에 따르면 취업자 임금근로자 52.6%,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19.5%, 미취업자 28% 순이며, 응답자의 학력분포는 4년제 대졸이 49.3%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 24.6%, 전문대졸 17.3%, 대학원 이상 8.9%임. 국민연금 가입상태로 살펴보면 가입자가 70.7%, 미가입자가 29.3%이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61%, 미혼이 34.6%, 기타 4.4% 순으로 조사되었고 자녀수의 경우 1명이 16.2%, 2명이 37.3%, 자녀가 없는 경우 39.8% 순으로 조사됨. 막내자녀의 연령은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19세 이상이 22.6%, 만 8세~18세가 18.9%, 만 7세 이하가 18.7%였으며, 향후 출산계획으로는 없음이 63.4%, 있음이 36.6%로 조사됨.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규모로는 대도시가 49%, 중소도시가 42.5%, 농어촌이 8.5% 순임.

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이다’는 의견에는 61.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보통이다’ 24.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13.8%를 차지하였다⁴⁾. 이를 5점 척도로 나타내면 평균 3.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남성(3.7점)이 여성(3.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3.5점)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3.7점으로 높았다. 향후 자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의 동의정도(3.8점)가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의 동의수준(3.6점)보다 높았고, 학력, 종사상 지위, 국민연금 가입상태, 혼인상태,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 도시 규모별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의 효과 인식

① 출산장려 효과

상당수 국민들은 출산크레딧제도를 통해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데 동의하였다(64.5%). 이 문항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하여 동의 정도를 구한 결과 평균 3.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크레딧제도를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정도는 특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3명 이상 3.8점, 2명 자녀 둔 경우 3.7점, 자녀 1명 혹은 자녀없음의 경우 3.6점). 반면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23.4%로 낮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36.6%,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대체로)’가 40.0%로 높았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2.8

점(5점 만점)이며, 성별로는 여성(2.7)이 남성(2.8)보다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약간 많았고,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는 미가입자가 가입자보다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 학력, 자녀수별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출산크레딧은 국가의 출산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산장려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였다.

② 젊은 세대에 대한 혜택 증진 인식

출산크레딧이 젊은 세대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8.9%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28.9%,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대체로)’가 22.2%로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동의정도를 나타내보면 평균 3.3점이다(5점 만점).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혼인상태별로 차이를 보여,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는 가입자(3.4점)가 미가입자(3.2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한 응답자(3.5점)가 기혼 유배우(3.4점)나 미혼(3.1점)보다 약간 더 높은 동의의견을 보였다. 성, 연령, 학력, 자녀수별에 따라서는 동의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③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인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에 대해 ‘여성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1.4%로 높았고, ‘보통이다’ 29.2%,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대체로)’가 19.4%를 보여주었다. 동의정도를 5점 만점으로 하면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여자

⁴⁾ 설문지에서는 매우 동의한다/동의한다/보통/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나, 여기서는 매우동의+동의를 합하여 ‘동의함’, 매우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을 합하여 ‘동의하지 않음’, 보통의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함.

(3.5점)가 남자(3.3점)보다 높았고,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는 가입자(3.4)가 미가입(3.3)보다 약간 높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3.6점)인 경우가 기혼 유배우(3.5점)나 미혼자(3.2점)보다 높았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았다(3명 이상인 경우 3.6점, 자녀 2명인 경우 3.5점, 1명 3.4점, 자녀 없는 경우 3.2점).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별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④ 노후소득 보장 효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8.7%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35.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5.6%였다. 이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3.2점(5점 만점)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했고(50대 3.5점, 40대 3.2점, 30대 3.0점, 20대 2.9점), 자녀수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컸다(3명 이상 3.4점, 2명 3.3점, 1명 3.2점, 자녀없음 3.0점). 성, 학력,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 해당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⑤ 가입유인 효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를 보니 '크레딧 혜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2.9%이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31.5%로 나타났다. 동의정도는 평균 3.0점(5점 만점)으로,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 출산크레딧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① 제공대상에 대한 의견(첫째자녀부터 vs. 둘째자녀부터)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첫째자녀부터 혜택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66.2%로 높게 나타났고, 현행처럼 '둘째자녀부터 혜택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33.8%로 나타났다.

첫째자녀부터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67.9%)이 여성(64.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20대 74.0%, 30대 73.2%, 40대 63.1%, 50대 56.1%).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첫째자녀부터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향후 자녀출산이 있는 경우(74.7%)가 없는 경우(61.3%)보다 동의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출산크레딧 적용수혜자(여성 우선 vs. 부부 합의)
출산크레딧 혜택 수혜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매우동의+동의)'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고, '부부 합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가 48.7%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식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성별로는 여성(57.0%)이 남성(45.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50대 58.4%, 40대 56.7%, 30대 46.5%, 20대 42.0%).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는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녀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여성에게 우선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학력, 도시규모별로 해당질문에 대한 응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③ 출산크레딧 가입인정기간: 축소/유지/확대

출산크레딧의 가입인정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입인정기간이 지금보다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2.2%이고, '현행대로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45.3%

로 가장 높으며, '가입인정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가 42.5%를 차지하였다.

출산크레딧에 대해 '가입인정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45.9%)가 △여자(39.0%)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52.7%), △30대(51.2%), △40대(37.3%), △50대(30.8%)순이었다. 향후 자녀출산 계획별로는 △있음(53.8%)이 △없음(36.0%)보다 높았던 한편, 학력,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 해당질문에 대한 응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④ 출산크레딧 비용 재원에 대한 인식

출산크레딧 비용 재원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서 관련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걷은 기금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10.6%이고,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12.9%, '국민연금 기금과 정부지원(세금)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가 45.2%로 가장 높으며, '현행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31.3%를 차지하였다.

⑤ 출산크레딧 확대 여부

출산크레딧제도 확대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3.4%이고,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7.0%,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9.5%로 가장 높았다.

출산크레딧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54.7%)가 △여자(44.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64.8%), △30대(54.7%), △40대(43.0%), △50대(38.0%)순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없음(58.2%), △1명(50.2%), △3명 이상(45.3%), △2명(40.8%)순으로 높았으며 향후 자녀출산 계획별로는 △있음(63.7%)이 △없음(41.3%)보다 높았다. 학력, 국민연금 가입상태별로 해

당질문에 대한 응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⑥ 양육크레딧의 도입 필요성

양육크레딧 도입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가 23.3%, '동의하지 않는다'가 14.7%로 나타났다.

양육 크레딧 도입여부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3.6점(5점 만점)이며, 향후 자녀출산 계획별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있음(3.9점)이 △없음(3.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 연령, 학력, 국민연금 가입상태, 자녀수별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육 크레딧의 수혜자를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가 22.0%,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대체로)'가 13.5%로 나타났다. 양육 크레딧의 수혜자를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3.7점(5점 만점)이며, 연령별로 해당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남자(3.8점)가 △여자(3.6점)보다 높게 드러났다.

⑦ 우선 확대, 도입되어야 할 크레딧에 대한 인식

우선적으로 확대, 도입되어야 하는 크레딧 제도(1순위)로는 '출산크레딧 확대'가 43.9%로 가장 높고, '실업크레딧 확대' 24.2%, '양육크레딧 도입' 18.3%, '군복무크레딧 혜택 확대' 13.5%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확대, 도입되어야 하는 크레딧 제도로는 '양육크레딧'이 35.9%로 가장 높고, '출산크레딧' 24.3%, '실업크레딧' 23.3%, '군복무크레딧' 16.6% 순이었다.

1, 2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대/도입되어야 하는 크레딧제도는 '출산크레딧'이 68.2%로 가장 높고, '양육크레딧' 54.2%, '실업크레딧' 47.5%, '군복무

크레딧' 3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출산크레딧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性)인지적 관점에서 출산크레딧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의 첫째자녀까지로의 확대, 양육크레딧 추가도입, 크레딧 여성 우선적용을 '기본설정(default)'으로 변경, 그리고 법정 모성

휴가기간(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에 필요한 재원 부담에 있어 국가의 부담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 및 크레딧 적용시점을 연금수급권을 취득 한 때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현행방식에서 크레딧 제공요인 발생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출산크레딧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제19조의 개정시안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⁵⁾.

〈표 1〉 출산크레딧제도 개선방안 : 국민연금법 개선안

현행법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신설〉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1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6개월 2.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6개월 및 둘째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2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① (동일) 1.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1안)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② 제 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 계속〉

5) 다만, 중장기 개선방안의 하나인 크레딧 적용시점에 대한 구체적 개선시안은 실업 크레딧의 보험료 지원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바, 개정안에 함께 담지는 아니하였음. 한편, 육아크레딧제도의 도입의 구체적인 시안은 공론화 및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	개정안
<p>③ 제1항에 따라 가임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p> <p>〈신설〉</p>	<p>(2안)</p> <p>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임기간 추가산입)</p> <p>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임기간은 가임자 또는 가임자였던 모의 가임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모가 추가기간을 포함하여도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 가임기간에 산입한다.</p> <p>③ 임신한 자가 출산전후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휴가를 받는 경우로서 법제91조제1항제1호에 의한 납부예외기간을 가임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임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가임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일부부담의 경우 적어도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p>

출처: 박복순·송효진·구미영·김수완·유혜경(2015).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5면.

참·고·문·헌

박복순·송효진·구미영·김수완·유혜경(2015).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일(2014). “국민연금 크레딧 개선논의 동향”. 연금포럼, 제53호, 2-3.